전남 시·군 저상버스 구입 25대서 9대로 일방 감축

교통약자 편의제공은 전시행정?

운영·관리비 과다 이유 1년도 안돼 취소 빈축

전남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25대를 도입키로 했다가 과다한 운영·관리비 등을 이유로 1년도 못돼 무더기로 취소해 전형적인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일선 시·군의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본예산에 책정했던 18억7500만원(25대) 가운데 12억900만원(64.5%)를 삭감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휠체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교통약자를 배려해 만든 특수 버스로, 차체 높이를 일반 시내버스보다 낮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대당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구입비는 정부와 전남도, 시·군이 98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업체가 나머지를 보태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와 영암군 등 2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한 지 1년도 안돼 전남도에 지원을 요청한 예산을 자진 삭감했다.

여수시의 경우 당초 20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키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 2대만 신청했고, 영암군은 2대를 구입하겠다고 지난해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한 대도 구입하기 힘들다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버스운영업체들이 과다한 운영·관리비 등을 내세워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예산을 감액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도로와 인도 등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한몫을 했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한 기본적 환경 개선에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르신 사진 그냥 찍어 드려요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회장 김영근)는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공동으로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 봉사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독거노인들과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엔 경로당 추운겨울 맞을듯

복지예산서 난방비 411억 전액 삭감

내년에는 170만명의 경로당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 넘긴 '2011년도 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부터 전국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예산삭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한시지원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2008년 추경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궁색한 변명"이라며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만 할 뿐이지 정부 차원에서는 애초부터 노인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 공약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부문에서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2008년 9월17일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 협상에서 508억원을 처음 확보해 전국 5만6480개 경로당에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을 지원했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으로 올해 예산에 410억6500만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5만8000여개의 전국 경로당에 5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총리 "다문화 지원 센터 예산 늘려라"

TF팀 구성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대책 마련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 이민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총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셋째兒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4세의 셋째 아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관련예산 556억원을 신청해 심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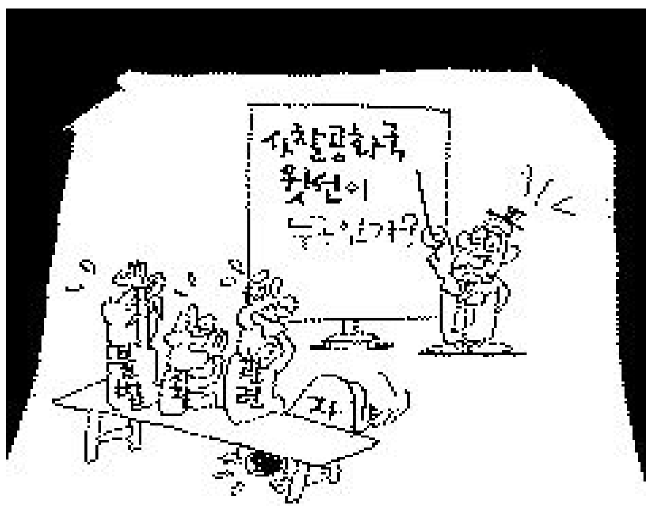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만 셋째아이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추가로 3만7000명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기재부 내에는 전 가구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정책이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교육이 아주 잘 된것 같다

무안~대불선 차세대 전동차 유지보수 수주

광주도시철도공사 4억여원 수익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주한 무안~대불선의 차세대 전동차 유지보수 및 시험선 운영관리 용역을 수주해 4억4000만여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용역사업 수주로 차세대 전동차 유지보수 및 시험평가 지원, 시험노선 운영·안전 관리 등 차세대 전동차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 관리를 맡게 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익성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첨단 전동차를 무안~대불선에서 시험 운영하는 용역사업으로, 공사의 선진 기술 노하우를 이용해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공사는 오는 28일에는 서울 9호선 전동차 유지관리기업인 메인트란스(주)와 기술협력 체결을 맺고 전동차 경정비 기술지원 및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정비 기술지도 및 정비 기술업무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기술력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선진 수준"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탤런트 천정명·팝페라 가수 로즈 장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위촉

천정명

로즈 장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25일 2010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명예홍보대사에 영화배우이자 탤런트로 활동 중인 천정명과 재미교포 팝페라 가수 로즈 장을 선정했다.

천정명은 2000년 KBS드라마 '학교 2'로 데뷔한 뒤 '여우야 뭐하니', '신데렐라 언니' 등에 출연했으며 제26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제4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신인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팝페라 가수로 활동중인 로즈 장은 스미스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수많은 무대에 서 왔으며 2008년 제16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팝페라상, 2009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2009문화부문 예술상을 수상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두 사람은 "앞으로 광주비엔날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이달 말 이용우 상임부이사장 등 비엔날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정기관 실태점검 개선방안 마련하라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정치인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권재진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참모가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